

주체적 국민 주권 보여준 오월정신, 헌법 수록은 당연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오월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하> 전문가에게 듣는 당위성과 과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 숙원이다.

44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수많은 정치인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무산돼 염원과 간절함이 남다르다.

광주일보의 헌법 전문가와 5·18 관계자들에게 5·18 정신이 헌법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5·18정신은 4·19정신을 넘어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권리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4·19정신은 국가 운영방식의 독재 타도인 데 비해 5·18정신은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보여줬다는 것이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단순한 저항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 스스로 국가를 바로잡고 주체·능동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점을 과

사회적 공론화로 합의 도출해 내 광주만의 것 아닌 우리모두의 것 헌법 수록 더이상 늦춰선 안돼 22대 국회 개헌 논의 본격화 외국·편협 악순환 고리 끊어야

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4·19 민주 정신에 덧붙여서 5·18 정신을 헌법에 삽입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한 교수는 "20세기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헌법 개정 운동의 공통점은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기본권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실천하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5·18정신이 헌법에 수록되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5·18은 국가의 억압과 폭정·폭력에 신음하던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식이 광주를 통해서 터져 나온 것"이라면서 "1980년 5월 당시 상황을 비추본다면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부산에서 일어났고 부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



민병로 교수



박석무 이사장



정수만 전 유족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교수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5·18헌법 전문수룩을 위한 국민투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광주 시민들의 항쟁은 헌정질서 파괴와 내란 행위에 맞서 싸운 정당행위였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헌법전문에 오월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수십년 동안 진행돼 온 헌법전문 수록의 불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민 교수의 분석이다.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5·18정신의 헌법수룩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야 막론하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은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결국 이들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민교수는 내다봤다.

민 교수는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도 중요하지만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 개원과 동시에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정부 형태, 지방자치 문제 등 개헌 내용을 논의한 후 20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정신의 헌법수룩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확립의 첫 발"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미 5·18정신은 헌법적 가치로 인정됐지만, 실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정치인 중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에서는 5·18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지층을 생각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됐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헌법전문에 5월 정신을 깊이 새겨넣어야 5·18의 애곡과 편협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월단체와 시민사회가 내용을 벌기 보다는 우선 같이 해야 할 사항을 고민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수만 전 유족회장 =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정 회장은 "지난 4년동안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의 조사의 결과가 끝나고 있지만 부실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부실해 자칫 정부 공식 문건으로 남을 보고서가 왜곡 세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전문 수록이 재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 전 회장의 주장이다.

정 전 회장은 또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돼야 유공자들의 명예도 회복된다고 봤다.

현재 5·18유공자가 민주유공자에 머물러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라도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왜곡대응백서' 기념재단, 27일 출간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 5·18 진상규명과 왜곡 대응 활동과 과정을 담은 책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응 백서'를 펴낸다.

재단은 오는 2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 왜곡대응백서 발간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5·18왜곡대응백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까지 재단이 수행한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활동을 종합해 100여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이다.

백서에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지난 원 5·18 왜곡 재판 등 5·18 왜곡·편협에 대한 법률 대응 과정, 국회 5·18 왜곡처벌법 제정 과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회의의 과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고 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5·18 왜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백서가 미래 세대의 5·18 왜곡 대처에 힘을 실어주고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5·18 44주년 기념행사 언론간담회에서 박미경(왼쪽 두번째) 5·18행사위원장이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5·18 44주년 행사, 청년·미래 세대에 '초점'

오월공론장 등 140개 사업 진행 청소년 기획·참여 행사 등 다채

올해 제44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청년과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춰 열린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는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올해 5·18기념행사에서 추모사업, 계승사업 등 총 140여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5·18기념행사는 정부 추모사업 4개와 5·18 행사위 주관 추모사업 6개, 시민공모사업 33개, 청소년사업 16개, 전국 5·18행사위 연대사업 14개, 광주 자치구 기념사업 24개, ACC·5·18기록관 등 협력사업 38개 등으로 구성된다.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등에서 열리는 해외사업 3개, 현행행사 2개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전야제' 본공연은 17일 오후 7시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금남로 300여m 공간에 사람이 뿔뿔이 있는 무대 3개를 설치하고 10개 마당으로 구성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아머시브'(몰입형) 공연으로, 3개 무대에서 춤과 연기, 노래 등 동시에 다른 공연을 하면서도 금남로 일대의 관객이 서로 소통하고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총소리와 헬기 소리 등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효과음을 자제하고 80년 광주 당시의 분위기를 '엇모리 장단'을 이용해 음악적으로 승화할 예정이다.

앞서 오후 5시에는 2000여명 참가자와 풍물단, 시민악사 등이 함께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펼쳐지며, 오후 6시 30분에는 광주시민과 전국 민주시민,

국제사회, 제주4·3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참사 등 국가폭력 및 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오월 가치를 전세대로 전달하는 '광주선언 2024'가 이뤄진다.

5·18행사위는 또 김빛비 문화기획자를 청년PM(Project Manager)으로 선정해 청년이 직접 5·18 담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미래 세대로의 전승 방법을 모색하는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청년 웹진을 만들고, 오월정신을 탐구하는 소규모의 오프라인 공론장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을 6회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사업단을 구성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 및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편성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오월민주광장'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광주 11곳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오월 체험·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학교에서 금남로 및 망월동 일대 현장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5·18행사위는 공법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포자회)의 5·18행사위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법단체와 행사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할 다 하고 있다.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5·18행사위원장은 "각 공법단체가 끝내 '공법선언문 폐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우나, 하나되는 오월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행사위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법단체가 주관하는 5·18 행사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